

이훈재
7-5



평양국제토론회 토론문

93.11.7~8

일본정부는 성노예피해사건에 대한 국제법적책임을
하루빨리 인정하여야 한다

로동신문사 기자

김정옥

오늘 일본에 의한 군성노예범죄사건과 이로 하여 초래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문제는 국제적인 관심사로 되고있다.

《일본군성노예》범죄사건은 당시 일본 정부와 군부가 국가정책으로 조선 여성들을 기본으로 하여 아세아와 구라파의 여러 나라의 20여만에 달하는 여성들을 《황군》으로 하여금 조직적인 강간과 료간 행위를 《합법적》으로 감행하도록 명령하고 제도화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늘까지도 인류력사가 알지 못하는 《중군위안부》와 같은 중대한 인권유린범죄의 진상에 대한 완전한 규명도 보상도 하지 않고 어물쩍해 넘기려 하고있다.

이것은 《일본군성노예》 희생자들과 그 피해 생존자들을 또다시 모독하는 것이며 세계의 양심과 정의에 대한 우롱이다.

《일본군성노예》범죄사건의 엄중성은 중세기적포악성과 현대적교활성을 겸비한 일본제국주의가 타민족말살정책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존엄과 여성들의 정조,

생명을 잔악하게 유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정의와 도의를 심히 파괴하고 국제법을 탄압하게 위반한 데 있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제반 국제법을 위반한 독일 등 전범국들의 책임 있는 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해당나라 정부는 전후에 피해자들 혹은 그의 유가족들에게 보상하였거나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무고한 다른 나라 여성들을 성노예화하고 그들의 대다수를 섬멸한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자들이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으며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타민족과 여성들을 깔보는 이전 군국주의의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과 관련 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정부는 애당초 《일본군성노예》 범죄사건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보상을 하려는 의사는 티끌만큼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군성노예》 범죄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의 자세와 립장이 그것을 잘 말하여주고 있다.

일본정부는 우선 전부후무한 반인륜적이며 비인간적인 특대범죄 행위인 《일본군성노예》 범죄사건을 반세기 동안이나

부인하면서 흑막속에 붙어왔다. 1990년대에 들어와
《일본군성노예》범죄사건을 해명하라는 요구가 국제사회에서
높아갔다. 만일 일본정부가 죄의식을 느끼고 해당 보
상을 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때에 벌써 성근
한 자세로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었다. 그런
데 일본 정부는 그것을 《민간업자들이 한 일》이라고 하
면서 정부적인 책임을 회피하였다. 1990년 6월 일
본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부 노동성 국장 시미즈는 의
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것은 《민간업
자가 한것으로서 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발표할수 없
다》고 하였다. 도대체 민간업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20만에 달하는 여성들을 강제런행할수 있었으며 조직화
할수 있었겠는가. 이 범죄사건은 관권, 군권이 다 동원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자행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이것은 범죄를 막아야 할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것이
다. 지금까지 진행된 조일회담들에서 우리 공화국대표가
성노예실태를 조사하고 사죄할데 대해 강력히 요구하였을
때 일본측은 《재산청구권의 테두리안에서 논의하는데 응
하겠다. 그러나 입증책임은 보상을 청구하는 측에 있다》
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측에서 증거를 내놓으라는 태도를

취하였다.

일본은 자기가 저지른 죄행에 대하여 시종 자료가 나오면 마지못해 인정하고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부정하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92년 1월 일본 《방위청》문서고에서 구일본군이 이 범죄사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발견되자 할수없이 《관여》는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본질문제와 관련되는 《강제성》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피해증언자들이 한결같이 당시의 체험을 증언해나서고 이 문제가 《인도에 대한 죄》로, 중대한 인권침해죄로 유엔에 상정되는 등 국내외의 압력이 높아지자 지난 8월 4일 일본정부는 제네바에서 인권소위원회가 시작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일본군성노예》 2차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것 역시 책임을 회피하자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것이였다.

그들은 이번에도 이 범죄사건의 전모와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성노예범죄감행의 동기와 은폐된 목적을 슬쩍 외면하였다. 특히 지금 확인된 공식자료에 의하면 《성노예》 피해자들속에 조선녀성이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나고있는데 일본정부는 이를 해명할 대신

《일본인을 제외하면 조선반도 출신자가 많다》고 하였다.

이것은 《성노예》로는 일본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조선녀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말인데 우리로서는 격분을 금할수 없다.

1992년 12월 일본국립공문서관에서 발견된 이전 혼성 제14려단 사령부가 작성한 공문서인 《위생업무순보》에는 《위안부 38명중 조선인 35명》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전 제11군병참병원의 군의였던 아소 테즈오가 당시 자필로 작성한 《화류병예방법》이라는 보고서의 제2장 《창부》라는 대목에는 《조선인창부는 80명, 일본인 창부는 20명》이라고 되어있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발견된 공적자료들은 조선녀성이 압도적다수였다는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피해생존자들과 다른 나라의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성노예》는 대부분이 조선녀성들이었다.

또한 문제로 되고있는 《강제성》에 대해서도 보고서에서는 《군당국의 요청을 받은 영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알선업자들이 참인, 위협 등의 형태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표현함으로써 《정부는 〈위안부〉들을 강제로 모집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일부 업자들이 감언과 강제로 모집한 것처럼 하였는데 그것도 《경우가 있었다》는 식으로 국가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국제적여론을 부마시키고 어떻게 하나 국제법적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다는것을 명백히 말해주고있는것이다. 즉 일본정부는 2차보고서에서도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책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어 그들은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국제법적책임과, 응분의 보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다.

진상과 해결책을 외면한 《조사결과》는 아무런 쓸모도 없다.

아직까지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일본정부당국자들의 립장과 태도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것은 그들이 성노예피해에 대한 보상이 《다무적 및 쌍무적 협정》을 통하여 이미 해결되었다는 립장을 답습하고있는 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어느 《조약》에도 성노예피해보상문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 어느 나라 정부도 중대한 인권침해로 하여 초래된 피해자들의 보상청구권리를 소멸시킬수 없다.

만일 일본정부가 조약을 빗대고 계속 《보상을 하였
다》고 고집한다면 그러한 조약은 국제법상 《유스 고첸
스》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 문제에서 이제라도 성근한
자세와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남을 위해서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우선 일본 정부는 성노예범죄가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로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정부가 국제법적
책임에서 어떻게 하나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일본의 명
예는 계속 훼손될 것이며 언젠가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
을 수 없다. 일본정부가 전후 군인 은급관계비를 설정하고
자국의 전쟁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들속에 범
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는가, 가해자는 자국민이라 하여
보상을 지불하고 피해자는 타국민이라 하여 보상을 지불하
기를 거절하는 것은 타민족에 대한 극도의 차별조치이고
또 하나의 멸시행위이다.

독일은 패전후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기 위하여 스스
로 전범자처벌에 나섰으며 《련방보상법》 등을 제정하고
개별적 피해자들과 유가족에 대해서까지 보상하였으며 지금
도 하고 있다.

우리는 전후처리와 관련하여 독일과 일본을 대비해 보게 된다. 일본은 전후처리를 너무나도 불성실하게 하였다. 일본은 전범자에 대한 처벌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오늘 국제사회의 정의와 피해자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것은 《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파괴된 국제사회의 정의와 도의, 심히 손상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러한 인권유린대죄가 국제사회에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는것이다.

보상은 단순히 돈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일본인들의 양심에 관한 문제이다.

죄파를 인정하기 전까지 반세기가 걸렸는데 그것이 보상으로 이어지자면 얼마나 더 걸리겠는가.

일본은 조선 여성들에게 성노예를 강요함으로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주었으며 그 죄파를 반세기이상 묻어두었고 오늘은 그것을 외면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정신적 및 심리적 고통을 들씌우고있다. 인간임을 자부한다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옳은 리성을 가지고 립해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정부는 스스로 국내법을 제정하고 성노

에범 죄사건에 책임있는자들을 재판하고 형사처벌하여야 한다. 이것이 반성의 자세를 표시하는 기본조치의 하나이다.

아직까지 일본땅에서 엄청난 인권침해범 죄자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고있다는것은 일본의 수치이고 인류의 수치이다.

나는 《일본군성노예》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즉시 취할것을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나는 일본정부가 적어도 전후처리에 성의를 보인 독일만큼이라도 성실히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이제라도 자기의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영상으로 나타나 자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아세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의 번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